

## 목포~부산 '무궁화호' 2023년엔 2시간40분이면 간다

전남도, 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 받아

4시간 단축...영·호남 교류·관광 활성화 기여

목포~보성 간 남해안철도 전철화 사업이 2022년 완공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전철화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부산 간은 현재보다 4시간 가량 단축된 2시간40분대 왕래가 가능해진다.

현재 목포~부산 간 남해안철도 중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복선 전철화가 완료 또는 공사 중이다.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은 전철

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미개설 구간인 목포~보성 간의 경우 단선 비전철로 추진 중이다. 열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철도 교통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철화가 절실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그동안 남해안철도 건설과 전철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건의했다.

일반철도 건설 후 전철화 공사를 추가하면 중복 비용이 400억원에 이르고, 동시 시공 시 B/C(비용대비편익)가 1.10으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어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설득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서 전철화 사업비 반영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으로 확정하고, 올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06억원을 요구했으나, 조사 결과 설계비 등 72억원이 조정된 1434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됐다.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20년 하반기 일반철도와 전철화를 동시에 시공, 2022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3년 개통될 예정이다.

현재 무궁화호 기준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6시간33분이 소요되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2시간40분



대 왕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단축돼 영·호남 문화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목포에서 보

성까지 전철화가 이뤄져 해남, 강진, 장흥, 진도, 완도 등 도민들이 양질의 철도교통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앞으로 순천까지 복선 전철화와, 전라선 익산~여수

고속철도, 서해안철도 건설 등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옛 전남도청,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로 복원



추진단 '복원공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옛 전남도청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로 복원될 예정인 가운데 '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문체부는 27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설계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착수보고회에는 5월 단체와 오월어머니회, 시민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원공사를 전담한 ISP건축사 사무소 고민규 사장은 옛 전남도청 설계 방향과 추진 일정, 설계내용 등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복원대상 건물 내·외부

마감재 등을 설명했다. 옛 전남도청은 7460.33㎡ 규모의 본관을 포함한 6개 건물과 주변 등이 복원될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옛 전남도청 △본관 1260㎡(3층) △별관 2228㎡(4층) △회의실 1527㎡(B1, 2층) △경찰국 2475㎡(3층) △민원실 682㎡(2층) △상무관 502㎡(1층) 등 6개 동이며, 393㎡의 연결통로도 확보할 예정이다.

ISP 관계자는 복원단을 통해 80년대 당시 건물 내·외부 사진을 수집해 이를 토대로 복원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찰국과 민원실 등의 내부 사진은 많이 부족한 상태로 내부 복원에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원계획은 올해 중으로 안전진단조사와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착수와 내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설계 자문회의와 시민단체와의 협의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 10월쯤 공사 발주 이후 2022년 12월쯤 복원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김후식 5·18부상자회 회장은 질의를 통해 "도청 건물에서 여러 탄흔을 직접 확인했다"며 "(리모델링 공사로)탄흔 위에 덧칠하면서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 탄흔도 복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장성군 시행사업 특혜 의혹 '차상현 의장' 사퇴 촉구

장성시민연대 "지위 이용 특혜 받았다면 의원자격 없어" 성명

"사익 위해 본분 망각한 행위"...사실 확인 땀 "법적 조치" 예고

〈속보〉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청운동 마을홍보관 건립사업 등으로 인해 차상현 장성군의회의장과 그의 배우자 등이 막대한 수혜를 입으면서 특혜 의혹(분지 11월 25일자·26일자 1면)이 불거진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진상 조사를 촉구하면서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장성시민연대는 27일 '장성군수

와 군의회 의장은 특혜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위를 이용한 사익 행위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이를 묵인하고 군의회 의장에게 특혜를 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성토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지위를 이용해 행정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의회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행정을 감시해야 할 군의회 의장이 사익을 위해 본분을 망각한 것은 의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차상현 의장은 진위 여부를 군민들 앞에 밝히고 사실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행정(장성군) 또한 특혜를 주었다면 군민에게 사죄하고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시민연대는 "현 사태를 중재할 일로 판단하며 예의주시하겠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석 기자

### 광주시 '2020년 도약의 해'

인공지능 등 핵심사업 집중 투자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도시와 광주형일자리, 도시철도2호선 등 주요 핵심사업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2020년을 '광주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내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유례없는 변화와 도약의 시간을 맞고 있다"면서

"2020년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2.4% 증가한 5조7120억원이다. 신봉우 기자

